

28개 민생법 본회의 통과... 22대 첫 여야 합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尹 거부 6개 법안 다음달 26일 재표결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5월 개원한 22대 국회는 이날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사망한 자녀 등)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씨의 오빠 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기층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만으로 폐기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등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도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왔지만, 개정안은 피해자의 연령·장애·질병 등을 고려해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가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때 보유재산

을 조회해 신속히 추심이 이뤄지도록 하고, 우리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 중인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도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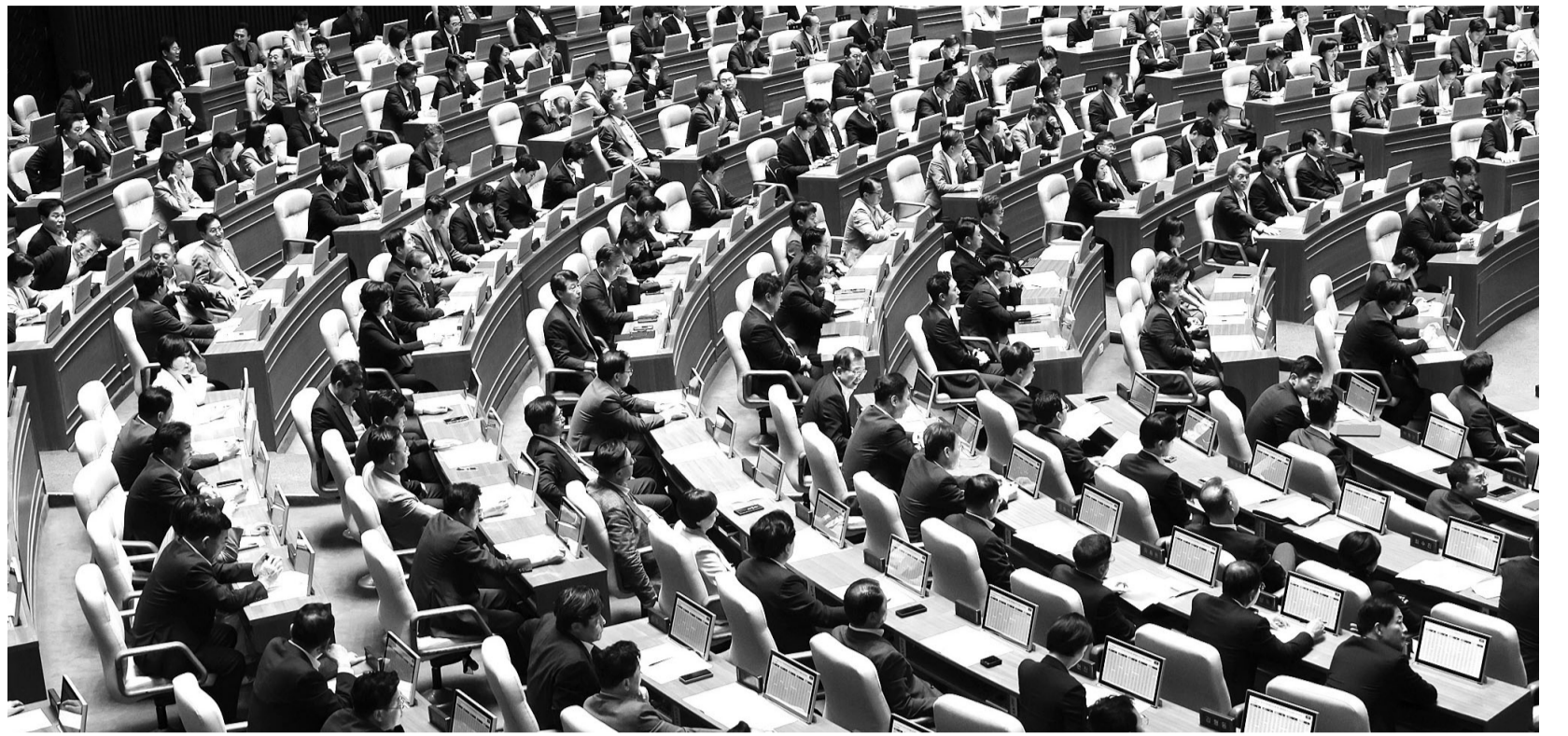
모바일 등기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의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과 상법·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기신청시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되기 때문에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법인이 지점·분사무소 등기를 별도로 마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지점·분사무소 등기도 할 수 있게 됐다.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기록에 변경사항만 등기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여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밖에 가덕도 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



28일 오후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석이 빈자리 없이 꽉 차 있다. 재적 300인 중 295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상속·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활성화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여야는 '방수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개는 이날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정준호 “몰카·딤편이크로 얻은 수익 몰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북구갑) 국회의원은 28일 촬영몰이나 몰카, 딤편이크 및 이를 활용한 협박과 관련한 경제적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2011년 인구 10만명 당 44.1건에서 2022년 80.2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018년 인구 10만명 당 14.4건이 발생해 최근 12년간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몰카·딤편이크 외에 동영상이나 딤편이크 및 이를 통한 협박·유포 등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의 경제적 유



인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배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해서는 처벌 외에도 경제적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고, 몰수가 어려울 경우 가액을 추정하도록 했다.

몰카·딤편이크 제작으로 수익을 얻거나 피해자를 강요·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성범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록 기자 kroh@

정진욱 “재생에너지 허가 중단 지자체에 책임 전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동남갑) 국회의원은 28일 “산업부가 전력망 계통포화를 이유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허가 중단 이유를 지자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남 탓”이라며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력망 포화 문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수립된 전력망 건설계획을 제때 실행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지자체의 협조가 중요하긴 하지만, 전력망 건설이 지연된 주된 원인을 지자체에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부가 겹으로는 호남권 등 일부 지역의 계통망 포화를 이유로 2031년 12월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석탄발전 정책이 배경에 있음에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부가 지난 27일 진행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에 대해서도 정진욱 의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가 중단된 호남과 제주 지역에 한국전력의 ESS 지원 사업을 우선 적용하고 조건부 허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저출생 등 ‘4대 미래 의제’ 초당적 논의

연구 단체 ‘전환과 미래 포럼’ 출범

저출생과 기후 위기 등의 미래 의제를 논의하는 초당적 국회의원 연구 단체인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전환과 미래)이 28일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전환과 미래는 초저출생,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저성장 등 ‘4대 미래 의제’로 정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 과제를 발굴해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포럼에는 국민의힘 13명, 민주당 14명 등 여야 의원들이 고르게 참여한다.

이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나란히 지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홍준 의원이 공동 대표를,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이 책임 연구위원을 각각 맡았다.

주 공동대표는 이날 인사발령에서 “초저출생과 기후 위기, 지방소멸, 저성장 같은 문제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립과 갈등으로 막혀 있던 국회를 초당적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 당면한 문제를 여야가 함께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포럼을 결성했다”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미래 문제는 여야,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국회에 상설위원회로 국가미래위원회를 만들어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갖게 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들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런 문제가야말로 여러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의원 활동을 잘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전환과 미래가 제시한 4대 의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해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추진 방향’을 주제로 비공개 강연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민주, 영광군수 재선거 4명 경선 곡성군수 후보경선은 결정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6일 치러질 영광군수 재선거에 나설 경선 후보 4명을 확정했고, 함께 치러지는 곡성군수 재선거 후보경선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영광군수 재선거 당내 경선 후보와 방식을 확정해 발표했다. 영광군수 재선거에는 6명이 경선 후보로 등록했지만 2명이 탈락해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 장기소 영광군의회 의원, 장세원 전 전남도의원, 장현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 등 4명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경선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 권리당원 50%로 이뤄진다. 1차 경선에서 2~3명을 뽑은 뒤 결선 투표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며, 경선일은 미정이다. 또 민주당 영광군수 선거 대책위원장은 5선의 박지원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곡성군수 재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방식과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김해나 기자 khn@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